

## 국제인권연맹 공개서한 "밀양에서의 시위 :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Protests in Miryang: open lett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3년 10월 10일, 파리

수신 : 박근혜 대통령

참조 :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근혜 대통령께,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Rights, FIDH)은 한국 남동쪽에 위치한 밀양 내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환경 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해당 공개서한을 발송합니다. 이들의 시위는 지난 10월 1일, 한국전력 공사가 126일 동안 중단되었던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신설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압 전력을 밀양에 69개의 송전탑을 건설해 부산 북경남 변전소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지속적인 저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법한 의도는 인지하고 있으나 국제인권연맹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적이라고 판단되는, 밀양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다음의 사건들을 미루어볼 때 시위를 통제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 11명의 시위자를 연행한 것은 여러모로 자의적으로 보입니다. 10월 3일, 7명의 시위자들이 경찰이 보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헬기장을 진입해 구속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울타리를 자발적으로 훼손하고 공동주거를 침입했다는 등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물도 의도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시위자와 경찰간의 상충되는 주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연행된 11명의 시위자 중 7명이 풀려났으며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구금기소 중인 상태이고 3명의 시위자(홍지혜, 이재식, 최진)은 불구속 기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7,80대 어르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식, 물, 텐트, 옷, 침구류, 보온장비 그리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포함해 기본적인 생필품의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농성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몇몇 경찰관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거나 사복을 입은 채 평화적 시위자들을 채증하고 있습니다. 1999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는 등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영장없는 채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위자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채증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채증을 계속했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결국 두 명의 시위자가 연행되었습니다.

- 2013년 10월 3일, 음식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시위 현장을 방문한 천주교 수녀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밀양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두건이 벗겨지고 가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인권연맹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사회의 민생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을 고안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과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역사회는 협의가 진행된 방식에 대해 명백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협의와 효과적 참여의 부재는 주민들의 불만의 핵심적 원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과거에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11번이나 중단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정부가 최근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권고를 내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사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업의 조건에 대한 공통의 합의와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시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인권연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한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

- 이상홍씨를 당장 석방하고 4명의 시위자(이상홍, 홍지혜, 이재식, 최진)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할 것. 밀양 주민들과 환경 활동가들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
- 시위자들이 음식, 물, 텐트, 침구류, 보온장비, 적절한 의료 조치 등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시작할 것.

해당 서한에 담긴 저희의 우려와 권고들은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우려를 반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그들과 연대하는 환경 활동가들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정부의 답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카림 라히지(Karim Lahidji)  
국제인권연맹 회장